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3626
----------	-------

제안연월일 : 2021. 12.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1년 5월 20일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21년 5월 27일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1. 6. 16.)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2021. 9. 2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1. 11. 11.)에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2021. 11. 11.)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에 편중·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그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에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그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료 징수의 감면 대상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기술료의 징수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법률에서 그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므로,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시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나.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기술료 감면 사유에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8조제3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경제적”을 “경제적·지역적”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징수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 및 제4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술료의 징수를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생략)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가능성	3. ----- -----경제적·지역적 ----- -----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③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 ⑤ (생략)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액-----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술료의 징수를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
4항에-----

<p>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p>
---------------------------------	-------------------------